

우리나라는 현재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어 시설규모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수요의 5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은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과 치료,

품종개량, 공해물질의 제거 등 의학, 공업, 복지 등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그 이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 만도 770여개의 병원, 산업체, 연구기관에서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선진공업화와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는 원자력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원자력의 이용에는 우리 가정이나 일반공장에서처럼 폐기물이 발생되기 마련이며, 그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시설 또한 국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36,000여드럼, 사용후핵연료가 1,648톤 발생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원자력발전소가동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이들 방사성폐기물은 종합관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중이지만, 각 시설의 자체저장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해 오고 있듯이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그 관리기술은 우리나라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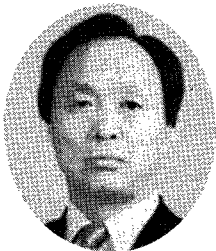
그러나 원자력의 이용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처에서는 무엇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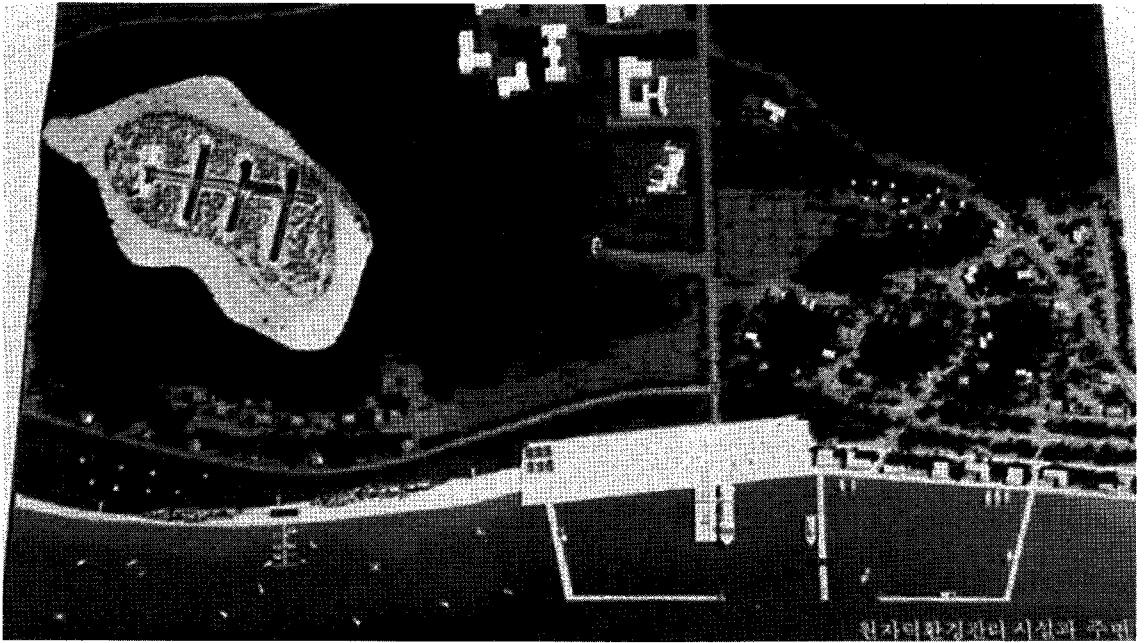
지역개발사업으로 원자력과 함께 잘사는 모범마을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불신으로 국가적인 과제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의 선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역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국민이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해당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가칭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자력과 함께 건강하고 잘사는 표본마을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김 지 호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원자력환경관리시설과 주민

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각종 국민이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주요관광지 및 터미널 등에서 원자력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에 대한 설명회, 언론인,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및 신문, TV에 해의 원자력시설에 관한 취재, 보도를 추진하였고, 과기처장관의 임해 7개도 지역 방문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해지역 47개군의 주민대표들이 외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시찰토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을 대상으로 자원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부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서울대와 한국자원연구소에 각각 임해지역과 도서, 폐광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작년말에 발표한바 있다. 이는 정부가 여러차례 밝혔듯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서울대의 연구조사결과 6개지역이 적합하다는 발표 후, 해당지역에서 주민의 반대시위가 계속되었고, 지난 3월 제14대 국회의



원 총선시 선거이슈로 등장했던 것 등을 볼 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치 않을 수 없다.

현재 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는 자원지역 및 연구조사결과 등을 종합검토중이며, 同결과가 보고되면 과학기술처에서는 이를 정부차원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해당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원자력과 함께 건강하고 잘사는 표본마을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규모 및 시행방법 등은 해당지역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및 문화, 장학사업 등 육성사업과 지방경제발전 촉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지역주민의 신뢰감을 조성,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정액을 금융기관 등에 공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원자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찬반의 의견은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반핵의 자유가 있는 만큼 찬핵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찬성이든 반대든 과격한 방법의 의견제시는 자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에너지는 어느 특정계층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이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성폐기물관리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앞서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아쉬운 때이다.■